

2026년도 중소금융 부문 감독·검사 방향



금융감독원

목 차

I. 중소기업 부문 현황

II. 대내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

III. 2026년 중소기업 감독 방향 및 추진계획

IV. 2026년 중소기업 검사 방향 및 추진계획

I. **중소금융 부문 현황**

II. 대내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

III. 2026년 중소기업 감독 방향 및 추진계획

IV. 2026년 중소기업 검사 방향 및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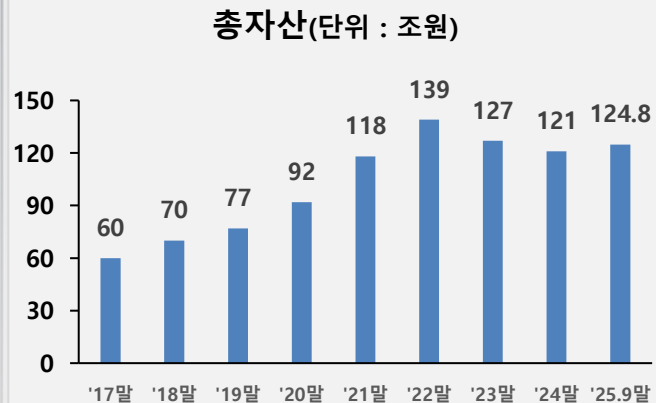
I. 중소기업 부문 현황 (1/2)



'25.9월말 중소기업 부문 회사수는 2,477개, 총자산 규모는 1,357.2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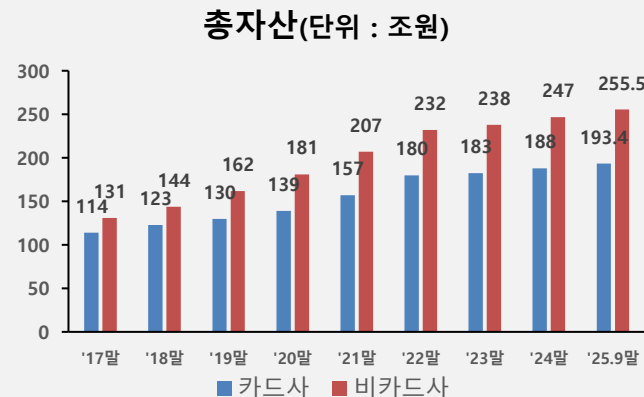
저축은행¹⁾ (79개)

◆ **총자산 : 124.8조원**
('25.1~9월중 +3.9조원 < ↑ 3.2% >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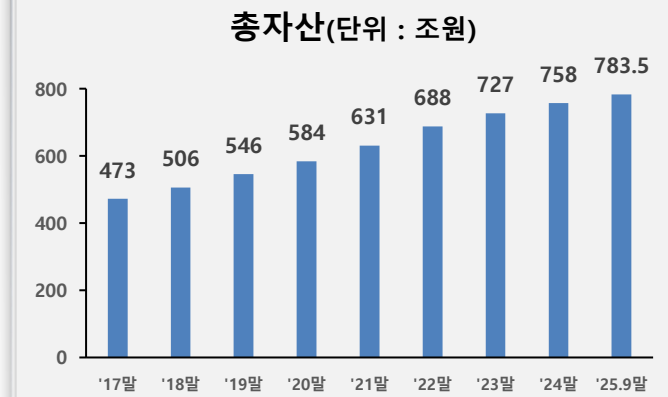
여전사 (195개²⁾)

◆ **총자산 : 448.9조원**
('25.1~9월중 +14.1조원 < ↑ 3.2% >)



상호금융 (2,203개)

◆ **총자산 : 783.5조원**
('25.1~9월중 +25.9조원 < ↑ 3.4% 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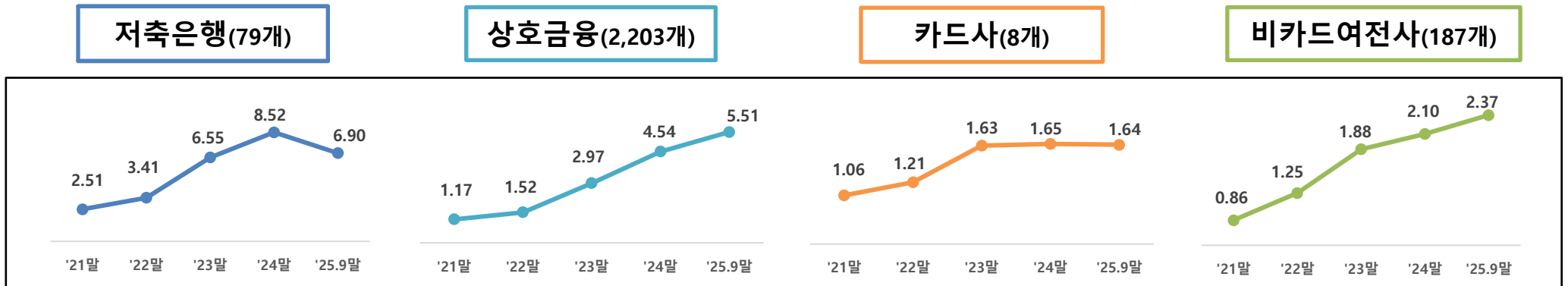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'25.9월말 기준(이하 동일), 2) 전업카드사 8개, 비카드 여전사 187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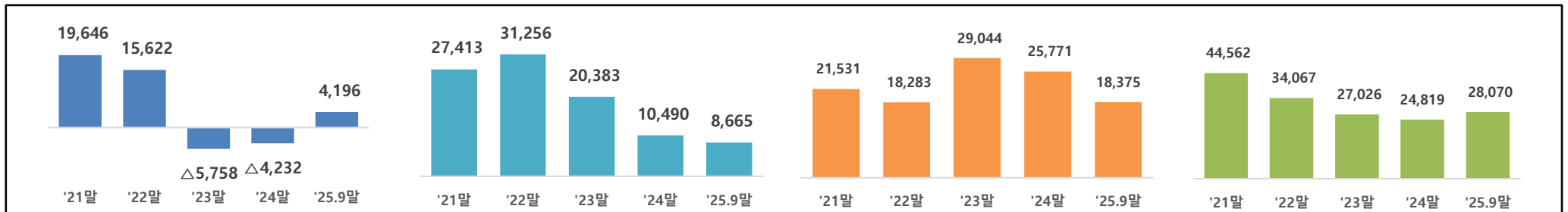
I. 중소기업 부문 현황 (2/2)

- ◆ 자산건전성 · 수익성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부진,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여력은 양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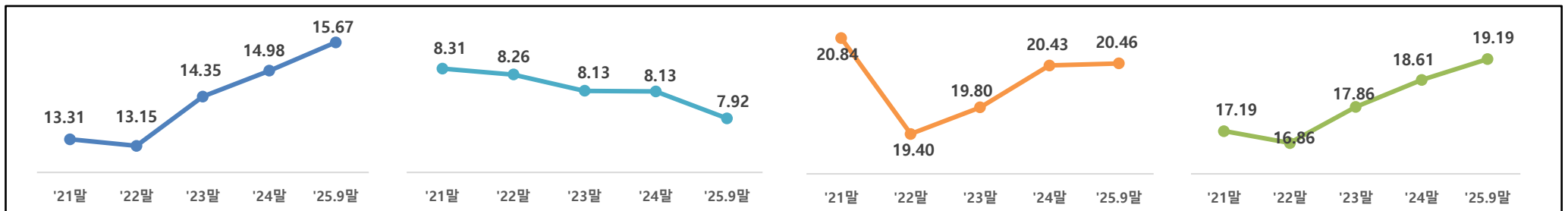
연체율(%)



당기순이익(억원)



자본비율¹⁾(%)



주 : 1) 저축은행: BIS비율, 상호금융: 순자본비율, 카드사 및 비카드여전사: 조정자본비율

I. 중소기업부문 현황

II. 대내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

III. 2026년 중소기업 감독 방향 및 추진계획

IV. 2026년 중소기업 검사 방향 및 추진계획

II-1. 대내외 여건

대내 여건

- **(K자형 양극화)** 반도체 호황 등으로 GDP 성장률 반등*이 예상되나 건설 등 비IT부문 회복 지연 우려

* 성장률 (24→25→26^e, %) 한국은행 : 1.5 → 1.0 → 2.0

- **(금융시장 변동성 확대)**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국내 금융·외환시장의 긴장감 확대
- **(서민·중소기업 부담 증가)** 지역 경기 부진,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서민·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

대외 여건

- **(주요국 성장둔화)** EU·中 등 주요국 성장률* 둔화,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

* 성장률 (25→26^e, %) IMF : (美) 2.1→2.4, (中) 5.0→4.5, (EU) 1.4→1.3,

- **(글로벌 보호무역주의)** 美 관세 정책, 광물 등의 원자재 무기화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지속 우려
- **(지정학적 리스크)** 중동·러시아·베네수엘라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환율·유가 등 변동성 증대

Ⅱ-2. 리스크 요인

① 취약계층 부담 증가 및 자금공급 위축

- 내수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저하 지속
-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서민,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 위축 우려

② 금융소비자 보호 어려움 가중

- AI 리터러시 격차에 따른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확대,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대
- 지속적인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, 채무구조도 도입 등 증가하는 현안에 비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은 제한

③ 성장기반 · 경쟁력 약화 가능성

- 디지털 경쟁력 약화에 따른 우량 고객 이탈 우려
- PF 부실정리가 지속되는 가운데, 새로운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변화 부진

④ 금융시장 잠재 위험 현실화

- 부실자산 정리 노력에도 건전성 저하 우려 상존
- 대내외 시장 변동, 시장불안 확산 등으로 중소 금융 회사의 유동성 문제 발생 우려

“감독당국 – 업계”가 협조하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

I. 중소기업금융부문 현황

II. 대내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

III. 2026년 중소기업금융 감독 방향 및 추진계획

IV. 2026년 중소기업금융 검사 방향 및 추진계획

Ⅲ-1. 핵심목표 및 감독 방향

업권 “본연의 역할”을 강화하여 튼튼한 “금융소비자 보호” 체계 구축

신뢰

- 금융소비자보호 강화
- 영업 관행 개선

상생

- 본연의 역할 강화
-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

안정

- 금융시스템 안정
- 건전경영 기반 확충

미래

- 금융회사 혁신 지원
- 감독규제 선진화

Ⅲ-2. 감독 업무 추진 계획 (1/4)

감독방향

1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및 영업 관행 개선

1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

- ◆ (공통) 채무조정 실적, 건전성 지표 등을 확대 공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
- ◆ (공통)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를 위해 신청 채널 확대, 심사기준 합리화 등 추진
- ◆ (공통) 비대면 대출·카드발급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본인확인절차 강화

2 영업관행 개선

- ◆ (저축은행) 대출중개수수료 합리화 등을 통한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
- ◆ (상호금융) 합리적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율 안내 강화
- ◆ (여전사) 카드 상품별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실적, 혜택,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 강화
운용리스 중개수수료, 리스료 산출구조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선택 지원

Ⅲ-2. 감독 업무 추진 계획 (2/4)

감독방향

2 업권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

1 중소기업업권 본연의 역할 강화

- ◆ (공통) 중·저신용자의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
- ◆ (저축·상호) 부동산·건설업 등 대출 쏠림 현상 완화 및 지역·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유인 방안 마련
- ◆ (여전사)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, PG계약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PG결제리스크 가이드라인 도입

2 취약계층 지원 확대

- ◆ (공통)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금지 등 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 지원 방안 추진
- ◆ (공통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상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및 비대면 채널 구축
- ◆ (여전사)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를 위한 자산건전성 기준 합리화 추진

Ⅲ-2. 감독 업무 추진 계획 (3/4)

감독방향

3 금융시스템 안정 및 건전경영 기반 확충

1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

- ◆ (공통) PF, 공동대출 등 취약부문 중심 모니터링 강화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지도
- ◆ (상호금융) 중앙회의 리스크관리 역량, 손실흡수능력 강화 등 중앙회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강화
- ◆ (여전사) 리스크 기반 자본규제 전환을 위해 PF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우선 적용

2 건전경영 기반 확충

- ◆ (저축)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합리화 지속 추진(예. 심사주기 통일, 수시심사제도 도입)
- ◆ (저축 · 상호)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(예. 계정 세분화, 가용자금 추가)
- ◆ (여전사) 경영실태평가(CAMEL)시 소비자보호 노력 수준이 반영되도록 평가 항목 개선

Ⅲ-2. 감독 업무 추진 계획 (4/4)

감독방향

4 금융혁신 지원 및 감독규제 선진화

1 금융혁신 지원

- ◆ (공통) 혁신금융서비스 및 겸영·부수업무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·추진 지원
- ◆ (저축·상호) AI기법을 활용한 약관 조항 탐지 등 불공정약관 사전 방지 시스템 도입 추진
- ◆ (여전사)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진행

2 감독규제 선진화

- ◆ (저축은행) 영업 형태 및 건전성 수준을 고려한 규모별·역량별 규제 차등화 지속 추진
- ◆ (상호금융) 동일기능·동일규제 원칙 下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(예. PF대출한도, 적기시정조치 기준)
- ◆ (여전사) 신기술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보완 검토(예. 실질 대주주 심사 강화)

I. 중소기업금융부문 현황

II. 대내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

III. 2026년 중소기업금융 감독 방향 및 추진계획

***IV.* 2026년 중소기업금융 검사 방향 및 추진계획**

IV-1. 중소기업금융부문 검사 방향

사전예방적 검사	✓ 금융상품 생애주기 쏠과정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유도
신종리스크 대응	✓ 금융환경 변화, 비정형·신종상품 출시 등에 따른 신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·점검 강화
책임경영 강화	✓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체계를 강화

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업무 강화	취약 금융회사의 경영 정상화 유도	효율적인 검사운영을 통한 건전성·유동성 관리 강화	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
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■ 위법·부당행위 엄정 조치	■ 취약 금융회사 선제적 관리 ■ 적기시정조치社 정상화	■ 건전성·유동성 지표관리 ■ 정리촉진·생산적금융 확대 ■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	■ 책무구조도 도입 ■ 내부통제·지배구조 개선

IV-2. 검사 업무 추진 계획 (1/4)

검사방향

- ✓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업무 강화

중점 추진과제

- ✓ 비정형·신종 대출상품에 대한 테마점검 실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- ✓ 상호금융 직접검사 강화 등 위법·부당행위 엄정 조치

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- 비정형·신종 대출상품의 설계·영업·취급·사후관리 등 단계별 소비자권익 취약요소 점검
-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취약점 및 위법·부당행위 발생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
- 금소법 위반 등에 소비자 피해사례 확인시 관련 기관·임직원 엄정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

위법·부당행위 엄정 조치

- 상호금융 조합장 및 대형조합 등의 금융관련법령 중대 위규혐의 件에 대해 금감원 직접검사 강화
- 대주주 부당지원,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위반 등 위법·부당행위 엄정 조치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
- 민원·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 및 제도개선 추진

IV-2. 검사 업무 추진 계획 (2/4)

검사방향

- ✓ 취약 금융회사 경영정상화 유도

중점 추진과제

- ✓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
- ✓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 유도

취약 금융회사 선제적 관리

- CAEL, 상시감시 지표 등을 통한 취약 금융회사 선별 및 관리계획 수립·이행 등 요구
-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·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여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개선 유도
- 취약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시 신규 대주주의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개선 지도

적기시정조치사 정상화

- 적기시정조치 이행·유예 종료된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및 경영정상화 여부 점검
- 조치요건 미해소시 조치 단계를 상향하여 건전성 강화 및 구조조정 적극 유도

IV-2. 검사 업무 추진 계획 (3/4)

검사방향

- ✓ 효율적 검사운영을 통한 건전성·유동성 관리 강화

중점 추진과제

- ✓ 건전성 및 유동성 지표 관리 강화
- ✓ 부실정리 촉진 및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유도
- ✓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지속

건전성 및 유동성 지표관리

- 금융회사별 연체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,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밀착 관리 실시
- 연체율이 높은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건전성 관리현황 및 관련 내부통제 등을 점검
- 유동성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유동성 부족이 예상될 시 선제적인 가용자금 확충 지도

정리촉진 및 생산적 금융 확대

- 업권별 부실PF 정리·재구조화 현황 지속 점검 및 신속한 부실 정리 유도
- 부실정리를 통해 확보한 대출여력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및 생산적 금융 확대 유도

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

- 가계대출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생시 현장점검 실시

IV-2. 검사 업무 추진 계획 (4/4)

검사방향

- ✓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

중점 추진과제

- ✓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
- ✓ 자율규제 기능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

책무구조도 도입

-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한 제도 안착 지원
- 책무구조도를 통해 상품개발시 충분한 소비자 편익 고려 및 상품설계~상환 쉼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
- PF부담취급, 사후관리 소홀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임원 책임 명시를 통해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

내부통제·지배구조 개선

-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진단 및 건전성·내부통제 관리 지원 능력 제고
- 상호금융권 「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」 및 「대형조합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^{예정}」 도입 관련 점검 및 지도
- 금융사고 보고체계(누락·지연보고 등)·사후관리, 예방대책 수립·이행여부 등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

감사합니다.

